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9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수립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9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12월 14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김설희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Vol.89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부·법무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산업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친환경 용적률 체계 마련

대전광역시,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 마련

11 건축·도시 분야 계획수립 동향

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부,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국토부,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떴다

복지부·국토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서울특별시,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3년~27년)' 수립

서울특별시, 위례선(트램) 본공사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마련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

서울특별시,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부산광역시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발표

경기도,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경상남도, '진주 상평일반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계획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26

국토부,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모아 발간
국토부, 부산·대전·전북 익산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농림부,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
해수부, 전북 부안 격포항 등 5개소,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산림청,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모범 도시숲 각 6개소 선정
서울특별시, 한강물길 관광자원화하는 '세계로 향하는 서해벚길' 사업 본격화
서울특별시, 미술문화 복합공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준공
서울특별시,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
부산광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15분 도시' 보행환경 조성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국가인증 획득
광주광역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 소유권 확보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전라남도, 해상교량 4곳 해당 시군과 사업비 50%씩 부담해 추진 앞당겨
전라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스테이션 1928' 착공
경상남도, '2023년 중기부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함양군 한들상권'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2022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중앙버스차로제(BRT) 확대...2단계 공사 시작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43

국토부, 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
산업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마련
서울특별시, 초실감형 3차원 지도 서비스,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첫 선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포털' 전면 개편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허브시스템 대시민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 개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전체 공간 메타버스 구현한 '내포혁신타운' 구축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10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주택정책과. 2022.11.10.



국토교통부는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법무부, 전세사기 및 소위 '강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주택임대차지원팀. 2022.11.21.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3.11.21~ '23.1.2)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함
채납정보 확인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용이하게 발급 가능함 ※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 → '제시' 하도록 함 - (발급시기)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 이어야 하지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 - (동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채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 가능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채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22.10.26.)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①소액임차인의 범위와 ②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하여,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
관리비 항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 적극지원	-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주거복지지원과. 2022.11.28.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유형	구분	주요 내용										
나눔형 주택 (25만호)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										
	청약자격	-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청년 유형은 가구원수별 1인 이외에는 가구당) ** 부동산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각 유형별 입주자 자산기준(단위 : 백만원, '22년 기준)〉 <table><tr><th>구분</th><th>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A)</th><th>청년 자산 기준 [(A) X 80%]</th><th>신혼부부·생애최초자 자산기준 [(A) X 105%]</th><th>청년 유형 부모 자산기준 [(A) X 300%]</th></tr><tr><td>순자산</td><td>325</td><td>260</td><td>341</td><td>975</td></tr></table>	구분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A)	청년 자산 기준 [(A) X 80%]	신혼부부·생애최초자 자산기준 [(A) X 105%]	청년 유형 부모 자산기준 [(A) X 300%]	순자산	325	260	341	975
	구분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A)	청년 자산 기준 [(A) X 80%]	신혼부부·생애최초자 자산기준 [(A) X 105%]	청년 유형 부모 자산기준 [(A) X 300%]							
	순자산	325	260	341	975							
	공급비율	-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 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입주자 선정방식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											
토지 임대부	-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대상 (예 :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유형	구분	주요 내용																																				
선택형 주택 (10만호)	분양가격	-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청약자격	-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6억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로,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로,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로,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4억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청년 유형은 가구원수별 1인)을 적용하되, 1인가구(일반)는 +20%, 2인가구(일반,신혼,생애최초,노부모)는 +10% 가산																																				
	공급비율	-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																																				
	입주자 선정방식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																																				
일반형 주택 (10만호)	일반공급 확대	-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																																				
	추첨제 신설	-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 <table><tr><th colspan="3">현행</th><th rowspan="7">➡</th><th colspan="2">개편</th></tr><tr><td rowspan="5">특별공급 (70%)</td><td>기관추천</td><td>15%</td><td colspan="2">15%</td></tr><tr><td>다자녀</td><td>10%</td><td colspan="2">10%</td></tr><tr><td>신혼부부</td><td>30%</td><td colspan="2">20% (△10%p)</td></tr><tr><td>생애최초자</td><td>25%</td><td colspan="2">20% (△5%p)</td></tr><tr><td>노부모</td><td>5%</td><td colspan="2">5%</td></tr><tr><td colspan="2">일반공급 (30%)</td><td>15%</td><td colspan="2">30% (+15%p)</td></tr><tr><td colspan="2"></td><td>(순차제 100%)</td><td colspan="2">(순차제 80%, 추첨제 20%)</td></tr></table>	현행			➡	개편		특별공급 (70%)	기관추천	15%	15%		다자녀	10%	10%		신혼부부	30%	20% (△10%p)		생애최초자	25%	20% (△5%p)		노부모	5%	5%		일반공급 (30%)		15%	30% (+15%p)				(순차제 100%)	(순차제 80%, 추첨제 20%)
현행			➡	개편																																		
특별공급 (70%)	기관추천	15%		15%																																		
	다자녀	10%		10%																																		
	신혼부부	30%		20% (△10%p)																																		
	생애최초자	25%		20% (△5%p)																																		
	노부모	5%		5%																																		
일반공급 (30%)		15%		30% (+15%p)																																		
		(순차제 100%)	(순차제 80%, 추첨제 20%)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를 확대		-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 '30% 이하(5%p 증가)'로 상향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현행) 직계존속이 아닌 세대주(지인)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청년(신청자)의 경우, 지인 및 지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개선) 신청자의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토지 자산 제외																																				

국토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도시정비정책과. 2022.11.29.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주요 내용
법개정 (‘22.6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 → (완화)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 -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아래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 * ①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중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정된 혁신지구에 대하여 중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 → 200만㎡로 4배 증가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15곳, '14~'21) 평균면적 171만㎡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하여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현행:2만㎡) -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 리츠 추가 -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

행안부·산업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자치분권과. 2022.11.01.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정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쓰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9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통합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계획 통합	자치분권·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평가
주요 시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과제로 구성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유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근거 신설
지방시대 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3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16+ 위촉 17) * (당연직)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 여가부장관,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보좌관 등 유관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시 회의에 참여 및 의견 개진 가능 - (심의·의결)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 - (보고·점검)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필요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점검 가능
균특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문화재청. 2022.11.09.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하여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규제혁신은 문화재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간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간소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의 조정을 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 완화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디지털 규제시스템 구축(~’26) -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여 비용·기간 단축 -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 실시(’23년)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25)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2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 -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하여 매입을 지원하였으나 보존조치 이행·관리(복토·공원조성, 이전보존 등) 비용까지 국가 지원 확대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별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 마련, 노후된 생활기반시설 정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 지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내 친환경 용적률 체계 마련

도시관리과. 2022.11.23.

건축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서울특별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특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4,600만 톤으로, 그 중 건축물이 68.7%를 차지('19년 기준)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정 방침]

구분	기정	변경
에너지 인증제 도입 시 상한용적률 적용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 설치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설치, 녹색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 획득시
친환경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범위 확대	서울시 의무기준 초과 적용시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서울시 의무기준 초과 적용시 인센티브 → 상한용적률 (국토법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내)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산식 신설	<신설> 허용용적률 × (1+ 0.7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B))	

대전광역시,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기준」 마련

건축경관과. 2022.11.10.

건축
정책

안전

대전광역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기준은 지하층 화재사고 시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하였다.

적용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휴게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금지했다. 또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창고,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등은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휴게시설 기준도 마련했다. 휴게시설은 화장실, 샤워실을 제외하고 최소 12㎡ 이상으로 설치하고, 휴게시설에는 세면기, 변기, 냉·난방, 환기, 조명설비, 식사를 위한 주방기구, 탁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휴게시설은 입주자와 동선이 분리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전광역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전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건축물 등 현재 지하에 사무실(휴게시설) 설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 건축심의 시에 적극 유도하고,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속통합기획과. 2022.11.07.

국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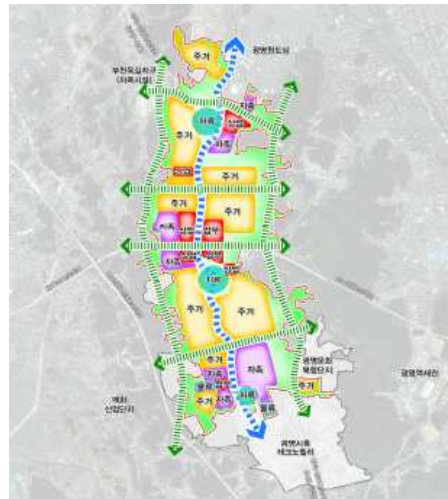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7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여건·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 철도를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구상(안)]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과 지구 내 양호한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녹지생태축을 구축하고 목감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여 2023년 관련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7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부동산평가과. 2022.11.23.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년 6월~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월 4일, 11월 22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월 23일)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			
		'22년 현실화율	기존 '23년 현실화율	수정 '23년 현실화율
	아파트	71.5%	72.7%	69.0%
	단독주택	58.1%	60.4%	53.6%
	토지	71.6%	74.7%	65.5%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월) 이후 '23.4월경 확정 예정)			
	〈종합부동산세〉			
	-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			
	공제액	• (1세대1주택자) 11억원 • (일반) 6억원		• (1세대1주택자) 12억원 • (일반) 9억원
	세율	• (2주택 이하) 0.6%~3.0% • (3주택 이상) 1.2%~6.0%		• 0.5% ~ 2.7%
	세부담 상한	• 2주택 이하 150%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		• 무관하게 150%

국토부,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떴다

해외건설지원과. 2022.11.25.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월 25일(금)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쩌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쪽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 컨소시엄 : LH(35%), KIND(25%), KBI건설(10%), 신한은행(5%)

11월 26일에는 LH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인 TDH 에코랜드 간 흥옌성 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하노이 롯데몰**과 스타레이크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우리 건설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 2단계 산단(클린산단 북측 2km위치, 260만㎡, 사업비 약 2,200억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의 시행을 위한 사업참여자 간 역할 및 의무에 관한 약정

** (사업주체) Lotte Properties Hanoi (사업비) 6억불 (기간) '16~'23(오픈), 오픈 후 운영

*** (사업주체) THT Development Co. (사업비) 31억불 (기간) '10~'28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위치도]



[단계별 사업추진 구상도]

복지부·국토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주거복지지원과. 2022.11.17.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연장아동이 보호가 종료되기 전부터 자립을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홀로서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고도화와 통합 정보안내체계 구축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자립준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년 120명→'23년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10만원)
보호연장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 프로그램(예: 부동산제도·4대보험교육 등) 개발·활용
보호대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 내실화) 자립지원 인력 충원, 아동 연령·장래희망 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 (조기종료아동)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민간 주체별 지원 활동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확산* 지원, 자립지원활동 연계 체계화 * 예) 소득·일자리·정서 등을 지원하는 드림은 프로젝트 전국화(전기안전공사 등 7개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3년~27년)' 수립

관광정책과. 2022.11.23.



서울특별시가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급변하는 마이스(MICE) 산업에 대응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민간 개발사업을 통해 잠실운동장 일대,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곡 등에 전시컨벤션 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돼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가 지금의 약 3.5배로 확대(약 6만 5천㎡→약 23만㎡)된다.

마이스 산업은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인 만큼, 국내로는 300개 이상의 마이스 업계로 구성된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를 활성화하고, 국외로는 뉴욕,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전문 에이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미래 마이스 성장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마이스 환경 구축 - 필(必) 환경안심 마이스 운영
마이스 산업을 산업의 발전과 도시혁신 견인 역할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대표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동시) 마이스 개발 - 서울 글로벌 대표 융복합 마이스 12 집중 육성 - 국제 이벤트 유치 및 서울 대표 이벤트 정례 개최 - 마이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통계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마이스 허브' 조성 - 글로벌 마이스 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 글로벌 마이스 인재 양성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 활성화로 해외 마케팅 등 협력체계 강화 - 국외 : 주요 해외도시에 있는 전문 에이전트와 계약을 통해 마이스 네트워크 확장 및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확대

서울특별시, 위례선(트램) 본공사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승인

신속통합기획과. 2022.11.0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서울특별시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이 11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부터 본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노면전차(트램)는 1899년 최초로 도입되어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었다. 2025년 9월 개통되면 57년 만에 서울 트램이 부활된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마천역(5호선)~북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km에 총 12개소(환승역 3개소)의 정거장을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여 지상은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된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 수변공원과 조화되는 케이블 형식의 교량이 건설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등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조감도]



[노선도]

서울특별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마련

주택정책과. 2022.11.30.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제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한다.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안심주거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지하 :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으로 매입하여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 - 고시원 :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 인증,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해 참여 유도,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 옥탑방 :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중인 곳을 대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 및 수리비용 지원,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 예정
안심지원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 거처’에 살고있는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주거상향’ 적극지원 -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 -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 확대 -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진행 후 12월말부터 지급 시작
안심동행 (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전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비영리조직(NPO)등과 ‘동행 파트너’ 구축 - 동행파트너 :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

미래청년기획단. 2022.11.17.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서울특별시는 지난 해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지적된 서울 청년활력 공간에 대한 기능 및 성과진단, 개선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역할 재정립과 전달체계 간소화 등 중장기 목표와 5대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
전

- 생활권 곳곳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
사각지대 없이 청년 누구나,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한번에 제공

목
표

공간 기능, 구조 개편
운영 효율화

모든 서울 청년정책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종사자 운영체계 내실화
공공성 기반 확립

5
대
추
진
과
제

- 1 **시설 통폐합** 5→2개 유형으로 간소화, 청년공간 전달체계 효율화
- 2 **기능 재정립** 광역·지역의 공간특성에 맞는 정체성과 역할 표준화
- 3 **공공성 확보** 공적 시설에 부합하는 조직·운영시스템 구축, 법제화
- 4 **협업체 마련** 청년 유관기관/자원 간 연계, 상시 협의구조 가동
- 5 **브랜드 관리** 대청년 홍보 강화, 공간의 품질관리 등 인지도 제고

연
도
별
추
진
계
획

목표분야	2022년 현재	2023년	2024년	2025~2028년
공간인프라 재구조화	청년활동지원센터 1	청년활동지원센터 1	서울광역청년센터 1	서울광역청년센터 1
	청년허브 1	청년허브 1	서울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
	서울청년센터 12	서울청년센터 15	서울청년센터 19	서울청년센터 25
	무종류지대 6	서울청년센터		
	청년교류공간 1	※ 운영종료		
성과 관리	조성수 만족도 인지도	5유형, 21개소 4.6점 15.9%	3유형, 17개소 4.7점 31.8%	2유형, 20개소 4.8점 47.7%
중 점 단위 과제	· 무종류지대 교류공간 · 운영종료 이관문제	· 무종류지대 전환 · 시립 청년센터의 표 이관협약 체결 · 활지, 허브의 성과분석	· 광역센터 출범, 안정화 · 무종류지대 전환 완료 · 청년센터 성과평가 시행	· 광역청년센터 운영 · 방식/주체 재검토 · 청년센터 구별 1개소 조성 추진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비전 체계도]

서울특별시, 여의도 최고령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신속통합기획과. 2022.11.07.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오랜 부침 끝에 재건축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정체됐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속속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 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주요 내용]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기능 도입	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p>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을 상향(3중주거 300% → 준주거 400%)</p>  <p>[건축배치안]</p>	<p>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조성 계획</p>  <p>[문화공원 내 전망데크 계획안]</p>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네트워크 확립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교 신설 계획 - ‘여의대방로’는 활력있는 상업가로로 변경, 보도 폭은 10m로 대폭 넓히고,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는 계획  <p>[입체적 경관계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여의도 일대를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 계획 - 200m 높이 범위 내(최고 60층~65층)에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치킴 마련  <p>[한강변 스카이라인 계획안]</p>

부산광역시,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창조교육과, 2022.11.07.



부산광역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구축을 위한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계적 수준의 영어교육과 소통환경 구축을 통해 시민의 영어교육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이 정주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 내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 유관부서, 구·군, 교육청, 대학 등 여러 기관과 지속해서 협업해 가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
시민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 시민 자문단 및 시민 영어 소통관 운영 - 공문서 내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지양 등 한글 지키기 사업 병행 추진 등
시민 영어학습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학교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 들락날락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영어교육 확대 - 기업에 찾아가는 영어강좌 제공 -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유치 - 영어119 무료상담소 운영 - 내·외국인 교류행사 확대 등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영어사용환경 실태조사 실시 - 외국인 불편상담 서비스 확대 - 맞춤형 영어표현 제작·보급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인턴십 확대 및 취업설명회 개최 등
공공부문 영어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들 영어능력 지원 확대 - 공공기관 영어전담인력 배치

인천광역시,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발표

도시개발과. 2022.11.10.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는 11월 10일 인천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간에 대한 계획, 사회기반시설(SOC) 공급계획, 매립지 장래 발전방향, 교통개선 방안에 집중해 북부지역이 아라뱃길로 단절된 생활권이 아닌 아라뱃길이라는 거대한 수변공간을 가진 인천의 생활권 도시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담겨있다.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간에 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가현산~근린공원~야생화단지로 연결되는 녹지축 제시 - 현재 조성 중인 국내 유일 드론 인증센터와 연계해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상부에 도심항공교통(UAM) 시험장을 설치, 도심항공교통(UAM) 체계를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신성장 산업 유치 계획 - 아라뱃길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아라뱃길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을 신설해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산업들이 집약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획
사회기반시설(SOC) 공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도서관, 체육센터 등을 2026년까지 46개소를 공급하고, 장래 40개소를 추가 공급 계획 - 검단신도시,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공급하고,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추진 계획
매립지 장래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오랜 난제인 사월마을 주변을 전체개발을 원칙으로 에코메타시티로 개발 계획 - 제2매립장 → '도심항공교통(UAM) 시험장'과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 제3매립장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열린공간', 제4매립장 → 바다와 연결한 지형여건을 고려해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 계획
북부지역 아라뱃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지역을 인천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를 이용한 북부 순환망 구축,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중봉대로 연결 추진 계획 - 북부 순환망은 인천1호선~인천2호선~서울7호선을 통해 환승이 가능한 순환망을 형성해 철도로 연결되는 도시 구상

인천광역시는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이 정책계획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 법정계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도시정책팀. 2022.11.23.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경기도는 포천시가 신청한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안)’을 23일 최종 승인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2035년 계획인구를 20만 5천 명(현재 16만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32.111km²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31.731km²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763.068km²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하는 ‘콤팩트시티’ 전략 추진 등을 위해 기존 1도심 2지역 중심에서 1도심(포천), 1부도심(소흘), 2지역 중심(영북, 일동)으로 계획하고, 포천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발전 축은 1개 주발전 축과 1개 부발전 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인구감소를 극복하는 균형발전을 유도했다. 중심지체계의 기능을 분리해 도심·부도심(포천, 소흘)은 양질의 정주거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발 및 산업발전의 거점이 되는 콤팩트시터를 구상했다. 반면 지역 중심(영북, 일동)은 한탄강,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산업의 자족기능 활성화 특화거점으로 계획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간선 기능 확대를 위한 수도권제2순환고속국도(포천~화도) 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옥정~포천선 광역철도사업 등의 광역 계획 외에도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수요응답형 노선(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

도는 이번 2035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에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권별 특화된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포천시의 미래상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스마트시티 포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상남도, '진주 상평일반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산업단지정책과. 2022.11.24.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진주시와 함께 노후산업단지인 진주상평일반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진주상평일반산단 내 구조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선정되어 건립 중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경상남도과 진주시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세 번째 사업이다.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진주상평일반산단 내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창업 및 유망기업 임대공간과 기술개발 및 복합편의 공간이 접목된 '항공·우주 플랫폼 시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항공·우주 부품·소재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진주시 상대동 33-16번지(부지면적 6,626㎡)에 3년간 총사업비290억 원(국비 70억 원, 지방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023㎡, 연면적 5,704㎡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우주 부품·소재 관련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인근 시세의 70%의 임대료와 다양한 규모의 업무 및 실험, 연구지원 공간을 제공하고, 우주항공 관련 여러 기관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우주산업에 최적화된 근로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마련

도시계획재생과. 2022.11.10.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40년 목표로 제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30일까지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즐겁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도민의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청정도시 ▲환경·경제·사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 ▲골고루 잘사는 활력 도시를 목표로 설정해 계획(안)에 담았다.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2040년 목표인구	- 100만명 (상주인구 80만명, 주간활동인구 20만명) - 환경·폐기물 등 기반시설계획의 근거가 되는 인구는 110만 명
공간구조	- 3광역 중심(제주 동부·서부, 서귀포 도심)과 2권역중심으로 권역별 성장거점과 중간거점을 육성 - 권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편 방향 제시
생활권	- 5대 권역생활권(제주시 동부·제주시 서부·서귀포시 도심·동부·서부)으로 설정 -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인 제주형 엔(n)분 생활권을 제시해 15분 도시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생활권별 인구배분	- 현재 제주 생활권과 이외 생활권의 56:44 비율을 2040년에는 49:51로 설정해 서귀포시·동부·서부 생활권의 인구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고려
토지이용 계획	- 공간구조와 부합된 토지이용계획 수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목표연도인 2040년의 시가화예정용지 37.19km ² 로 도출 - 해안변 8개소 등은 일원화된 토지이용체계를 위해 장기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제시
도시관리 방안	- 스마트 성장, 난개발 관리, 지역적 차별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주거·상업지역은 압축적 토지이용,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하되, 용도지역의 상향시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도록 방향 제시

도심은 밀도의 계획적 관리와 도심활성화 전략으로 엔(n)분도시 구현, 비시가화지역으로 시가지 확산 대응 강화토록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중요한 관리방안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 및 보전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계획과 연계한 방향성도 포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계획

건축지적과, 2022.11.30.



민선8기 제주도정은 제주지역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등 4가지 모델로,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2,100호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주택매입 등으로 4,900호를 임대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7,000호에 이른다.

민선8기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분양주택’으로의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00호) : 토지는 공공소유, 주택만 분양 - 청년원가주택 (500호)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 6년 분양전환형 주택 (200호)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 일반공공분양형 주택 (800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공임대 : 3,430호 - 고령자복지주택 : 420호 - 기존주택 매입 : 1,050호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모아 발간

주택건설공급과. 2022.11.17.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층간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집으로 이사한 입주자가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건 →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되어 있어 하자로 판정
먼지다듬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사에서 방역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먼지다듬이가 발생한 사건 → KS기준(5~13%)에 적합(8.7~9.6%)하고, 벌레 발생원인이 시공상 결함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하자 아닌 것으로 판정
세탁실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실 폭이 좁아 입주자가 사용하던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건 → 해당 세탁실 폭 측정 결과 669mm로 사용검사 도면상의 폭(660mm)을 초과, 하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하자 아닌 것으로 판정
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에 결로가 발생하여 하자신청한 사건, → 창호 부속재인 모헤어의 길이가 부족하고, 풍지판은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하자로 판정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하여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 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하므로 하자로 판정

국토부, 부산·대전·전북 익산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첨단자동차과. 2022.11.24.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자율차 중요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정부위원 5명(국토부 2차관, 기재부 과기부·중기부 차관, 경찰청장)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

** 시범운행지구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써,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 14개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지구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시범운행지구 도입서비스 및 범위]

연번	지자체 (지구)	사업유형	세부내용
1	부산 오시리아	수요응답 셔틀버스	-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2	전북 익산	셔틀 버스	- 익산 KTX역 ↔ 원광대, 시외터미널 등(10.7km)
3	대전광역시	BRT버스	- 세종터미널 ↔ 반석역 구간(9.8km)

농림부,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공모

농업정책국 농지과. 2022.11.13.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자를 공모한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흥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23년 사업비는 6ha(3ha 이내 2개소), 5,448백만원으로 유흥농지, 국·공유지 등 매입비 2,448백만원, 생산기반 조성비 3,000백만원 등 개소당 총 2,724백만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대상으로 2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개소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1개소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 등과 연계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예정지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스마트팜 영농, 농업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전북 부안 격포항 등 5개소,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주택건설공급과. 2022.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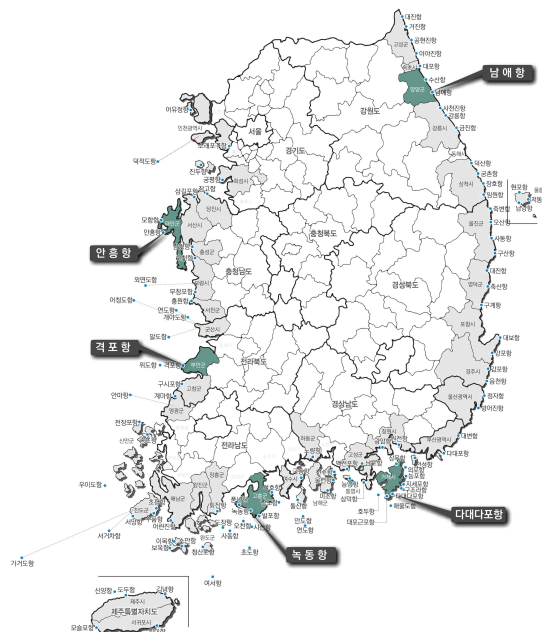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의 대상지로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을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3년간 5개 국가어항에 각각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촌계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소유 시설 등 민간 시설에 대한 정비도 같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고, 21개 국가어항이 공모에 참여하였다. 어촌과 어항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부안 격포항, 강원 양양 남애항, 전남 고흥 녹동항, 경남 거제 다대다포항, 충남 태안 안흥항 등 5개 국가어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어항 위치도]

산림청,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모범 도시숲 각 6개소 선정

도시숲경관과, 2022.11.03.



산림청은 3일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6곳과 모범 도시숲 6곳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녹색도시 우수사례로는 도시숲 부문에서 ▲최우수 ‘경기 평택시 통북천 바람길숲’ ▲우수 ‘전북 익산 인화 도시숲’, 가로수 부문 ▲최우수 ‘완주군 삼례로 가로수’ ▲우수 ‘서귀포시516로 가로수’, 미세먼지 차단숲 부문 ▲최우수 ‘전남 광양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 ▲우수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이 선정되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사업은 도시숲·가로수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 향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기능이 있는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모범 도시숲 인증 사례로는 도시숲 부문의 ▲ ‘평택시 통북천 바람길숲’(경기 평택시청), ▲ ‘포항 철길숲’(경북 포항시청), 가로수 부문의 ▲ ‘교대로 그린 등곶길’(부산 연제구청), ▲ ‘도초 팽나무 10리길’(전남 신안군청), ▲ ‘완도 호랑가시나무길’(전남 완도군청) ▲ ‘화개 십리벚꽃길’(경남 하동군청)등 6곳이 선정되었다.

「도시숲법」 시행(’21.6.) 후 처음 도입된 모범 도시숲 인증은 올해 인증 관련 세부 기준 및 심사 방법·절차를 마련해 처음 심사하였으며, 도시숲의 운영·관리, 이용 부분까지 심사 부분을 확대하였다.

서울특별시, 한강물길 관광자원화하는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 본격화

한강사업본부, 2022.11.14.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문화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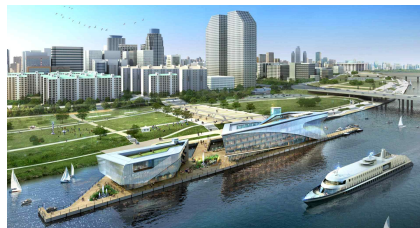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한강의 물길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크게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23년부터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을 정기운항하고, 2단계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서울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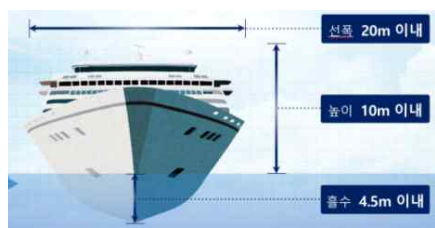
서해뱃길 사업의 첫 단추인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은 올해 시범 운항을 시작하고, 2023년부터 정기운항을 추진한다. 운항 재개를 앞두고 1천 톤 급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한강 갑문 인근 수역의 수심을 3.5m로 확보하는 준설을 올 9월 완료했다.

2단계로 서울 금융의 중심이자 푸른 녹지와 한강 수변문화가 어우러진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2026년 운항 개시를 목표로 조성한다. 서울항이 조성되면 여수, 제주도 등 국내선 항만 기능을 우선 수행하고, 향후 해양관광 수요를 바탕으로 CIQ(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기능을 도입해 중국 등 동북아를 연결하는 국제항으로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 터미널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항을 복합문화관광명소로 만든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와 연계해 국제회의장, 수상호텔 등을 조성하고 노을전망대 등 관광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항에서 한강변 주요 관광지를 오갈 수 있는 수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서울항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항 개념도]



[한강 맞춤형 선박]

서울특별시, 미술문화 복합공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준공

주택건설공급과. 2022.11.01.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서울특별시는 독립된 미술아카이브 시설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종로구 평창동에 완공하고, 오는 '23.3월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미술아카이브 전문 공간’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5,590㎡ 규모로 4개의 나누어진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기록과 예술을 위한 미술관이다. 네 개의 공간을 지형에 순응하여 탈중심적인 병렬로 배치하고 서로 관계 지어 도시공간의 연결과 관계 속에서 도시를 이루는 요소로 확장되는 도시 계획적 개념이 들어간 수평적 차원의 다원적 미술문화복합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건물과 연결된 외부공간과 옥상정원은 시민들의 쉼터 및 야외 전시공간의 기능을 하는 마을의 마당으로 제공된다. 출입구가 없어 마을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종로구 평창동 차고지 부지가 미술아카이브에 특화된 전시, 연구·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수집-연구-전시가 연계된 유기적 체계를 이룬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현재 미술 기록·연구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서울특별시, 반지하 가구의 이주 지원 ‘특정바우처’ 신설

주택정책과. 2022.11.25.



서울특별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28일(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받는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바우처-반지하 특정바우처 비교]

구분	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소득 자산 요건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60%, 재산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침수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가구

부산광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15분 도시’ 보행환경 조성

걷기좋은부산추진단. 2022.11.08.

도시
정책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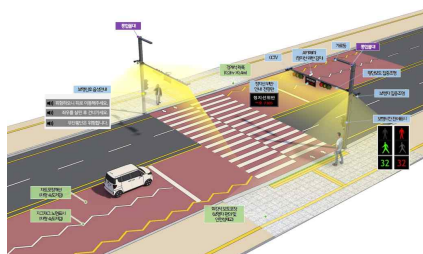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15분 도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련되고 안전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횡단보도 내에서의 스몸비족(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 등 보행자 신호위반 예방, 도로의 시인성 강화 및 노년층 취약 시간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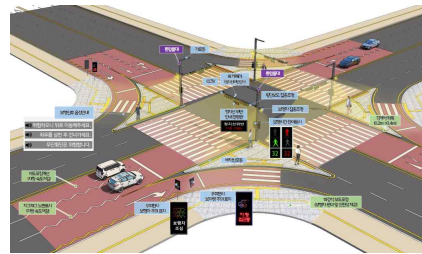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적색등, 녹색등 모두 전체 잔류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설치 ▲눈에 확 띄는 보도 판석 포장 ▲보도 경계석 폭 확대(20cm→40cm) ▲운전자로부터 보행자 인지를 위한 보행자 집중조명 설치 등이 있다.

또한 운전자의 시인성 제고를 위해 ▲횡단보도 전 20m가량을 차량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인지를 위한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 차선도색 ▲정지선위반안내(AI카메라), CCTV, 횡단보도 음성안내 등 스마트 장비를 확대 설치하며, 세련된 도시이미지를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각종 지주를 없애고 통합지주에 표지판 등을 이전 설치하고 LED가로등, 바닥 신호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 중심으로 중구 남포사거리(BIFF거리~자갈치시장), 동구 부산역 앞 일원, 해운대 영화의 전당 교차로 일원 등 8 곳 22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단일로 디자인 개선안]



[교차로 디자인 개선안]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국가인증 획득

스마트도시담당관. 2022.11.09.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가 올해 광역도시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국가 인증을 획득(인증일: 2022. 9. 29.)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56개 정량지표와 5단계 정성지표를 측정해 평가했으며, 인증을 신청한 24곳의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4곳의 대도시와 5곳의 중소도시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스마트 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과 방재·환경·방범 등 다양한 공공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신개념 서비스를 도입하고 확산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주요 추진사업>

- (혁신성 부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GIS 플랫폼 활용 화재대응 현장지휘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인천디지털 시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 디지털 마을플랫폼 등
-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부문) 디지털트윈 행정, 확장현실(XR) 메타버스 프로젝트, 인공지능(AI) 기반 업무자동화(RPA), 인천e지맵 등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부터 스마트도시 국가인증 준비를 위해 2021년 도시 인증을 받은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2024 인천시 스마트도시 계획(2020~2024 중장기계획)에 따른 스마트도시 수준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국가지원,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의 객관적 지표 및 수준진단 필요성 증대에 따라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센터, 디지털 트윈, 확장현실(XR) 메타버스 사업 등을 포함한 22개 우수 서비스와 스마트기술 및 인프라 현황 관련 평가자료를 16개 기관 33개 부서와 함께 준비해 왔다.

광주광역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 소유권 확보

신활력총괄관. 2022.11.27.

건축
정책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광주광역시는 지난 24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매각 건이 승인됨에 따라 혁신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혁신지구 부지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국토부와는 지난 10월 협의를 완료하고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이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도 속도를 내게 됐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민선8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5대 벨트 중 하나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과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을 통해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5개 마중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빚고을창업스테이션은 연말 계획공정률이 38%로, 2024년부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광주역 창업벨트를 중심으로 관내 창업시설을 연계해 창업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감도]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사례집 제작·배포

토지정보과, 2022.11.10.



안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응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전라남도, 해상교량 4곳 해당 시군과 사업비 50%씩 부담해 추진 앞당겨

도로교통과, 2022.11.05.

국도
정책

도시
정책

전라남도는 섬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4개소의 해상교량 신설을 위해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설 추진하는 해상교량은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오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있는 지방도 연도(連島)교량 4개소다. 총 사업비는 약 5천280억 원이다.

섬 주민의 숙원인 해상교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가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각각 소요사업비의 50%를 부담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전라남도는 올해 지난 10년간 평균 투입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2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 해상교량 신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주민의 섬 연결 욕구 해결을 위한 시군의 의지와 지방도내 대규모 해상교량의 신속한 추진을 원하는 전라남도의 열의가 맞물린, 전라남도와 시군 간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지역 주민 최대 숙원사업인 금오도 연결 해상교량이 현재 공사 중인 국도77호선 화태~백야 간 연도교와 연결되면, 미래 금오도는 남해안 관광개발 여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여수 대표 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는 약 2천억 원이다.

전남지역 지방도 해상교량은 총 24개소다. 현재 10개소가 공용중이고, 추진 예정인 4개 해상교량을 제외한 10개소가 장래 계획 중이다.

현재 미개설 해상교량 14개소(총연장 26.5km)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조 6천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지방도 사업 중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연륙연도교는 국도 승격과 함께 ‘도로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전라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스테이션 1928' 착공

정책기획관. 2022.11.08.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전라남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가운데 '곡성 스테이션 1928'이 8일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이날 곡성 옛 오곡초등학교 일원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상철 곡성군수, 서동용 국회의원, 진호건 전라남도의원, 윤영규 곡성군 의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곡성 스테이션 1928 착공을 시작으로 12개의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곡성, 구례, 장흥, 진도), '21년(목포, 장성, 해남, 신안), '22년(담양, 보성, 영암, 함평)

곡성 스테이션 1928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새로운 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스테이션과 옛 오곡초등학교가 개교한 해인 1928을 조합한 의미다. 노령화 가속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청년, 은퇴자, 귀촌인을 곡성으로 유치하기 위한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2만 1천505㎡ 부지에 건축 2천268㎡ 규모로 건축학교, 숲놀이학교, 아토피치유학교, 청춘작당(100일간 곡성 살기) 등 교육, 체험, 거주,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인접 관광지인 침실습지, 동화정원, 기차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또한 2023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과 연계해 폐교된 오곡초등학교 일원(3만 5천707㎡)이 지역의 꿈과 희망인 가족과 청년이 곡성으로 돌아오는 지역 활성화 특화단지 조성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2023년 중기부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함양군 한들상권' 선정

소상공인정책과. 2022.11.26.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3년 상권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경남 함양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5개 상권이 선정되었으며, 전통시장·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일반상권 4개, 도심형 소형상권은 1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경남은 도심형 소형상권에 '함양군 한들상권'이 선정되었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시행에 맞춰 도심형 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첫 대상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함양군이 선정되었다.

도심형 소형상권은 점포수 100개 이상 400개 미만의 소형상권이 대상으로,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운영의 주체로서 상생협력상권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함양군 도시형 소형상권인 '한들상권'은 함양군 함양읍 지리산 함양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으로 상권면적 64,825㎡, 영업점포수는 210개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이며, 총사업비는 최대 60억(국비 30억, 지방비 3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한들상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쌀전 빛거리 조성 등 상권 환경개선 사업 ▲지리산, 상림공원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통합 브랜드 및 특화 먹거리 개발 ▲용평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한들거점센터와의 상생협력상가 활성화 및 무인픽업함 ▲결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의 디지털 상권 조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22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선정

여성친화도시, 2022.11.01.

도시
정책

안전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임산부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1~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24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모든 제안에 대해 소관부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했으며, 입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 시상금 :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30만 원

선정된 우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 최우수(1건): 「임산부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발급」
- ◇ 우 수(2건): 「도움요청 환경개선으로 여성폭력피해 예방」
「한부모 가정 일당백 맞춤형 교육 추진」
- ◇ 장 려(2건): 「자동차 안전벨트」
「디지털 성범죄 아웃, 몰카 아웃 서비스」

최우수로 선정된 ‘임산부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발급’은 도내 읍면지역에 산부인과가 거의 없고 임산부가 사실상 교통약자이동서비스를 사용하기 힘든 실정을 고려한 제안이다. 임산부용 교통카드 발급으로 버스·택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하자는 내용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중앙버스차로제(BRT) 확대…2단계 공사 시작

대중교통과. 2022.11.22.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 중앙버스차로제(BRT) 2단계 공사를 이달말부터 본격 추진한다.

현재 가로변 버스차로제가 운영되는 서광로 구간(광양사거리~연동입구)부터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 총 10.6km를 중앙버스차로제로 바꾸게 된다.

이번 BRT 2단계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간선급행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돼 국비 159억 원을 확보했다.

* 총 사업비 318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서광로에 중앙버스차로제가 도입되면, 아라초 사거리부터 공항까지 대중교통 이동 시 12분이 단축될 전망이다.

2017년 제주BRT 1단계 사업으로 아라초 사거리~제주시청 구간에 중앙버스차로제를 도입한 뒤 도민 여론조사에서 ‘버스 통행속도가 개선됐다’는 응답이 43%, ‘편의성 및 정시성 개선’에 76%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도민 만족도를 토대로 교통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게 됐다.



[BRT 2단계 공사 계획도]

국토부, 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개시

국가공간정보센터. 2022.11.20.

국토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마련

신산업분산에너지과. 2022.11.09.

도시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산업부·한전·민간 전문가·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필요성·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 * 데이터센터는 '22.6월 기준 146개소/1,742MW가 있으며 '29년까지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신청한 수요는 466개소/32,263MW로 파악됨 -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①데이터 안전 및 보안, ②전력계통, ③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산업부는 동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초실감형 3차원 지도 서비스,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첫 선

공간정보담당관. 2022.11.01.



서울특별시는 가보지 않아도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초실감형 디지털 3차원 지도 서비스를 2022년 11월 2일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시범 공개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사업으로 실감형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을 보유한 (주)모빌테크, (주)티랩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초실감형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공간정보 과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외지도 시민 서비스 내용]



서울특별시는 향후 S-Map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서 누구나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며, 육조거리 재현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서비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시민 제안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정보 과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계획포털’ 전면 개편

도시계획과, 2022.11.23.



이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각종 도서를 시청·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도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동네뿐 아니라 관심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카카오톡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도 개선됐다.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신청만 하면 최대 3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열람 공고 사항을 알림톡으로 매주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달라진 ‘서울도시계획포털’의 주요 내용은 ①도시관리계획 도서 열람과 주민의견 제출 온라인으로도 가능 ②우리동네 도시관리계획정보(고사·공고) 무료 알림서비스 기능개선 ③서울시,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으로 분산됐던 도시관리계획 정보 ‘서울도시계획포털’로 일원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서울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도시계획포털’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했다.”라며 “앞으로도 포털 이용 활성화와 온라인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허브시스템 대시민 개방형 플랫폼’ 서비스 개시

지능형도시과. 2022.11.29.

도시
정책

시민 누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세종형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빅데이터허브시스템 대시민 개방형 플랫폼 (www.sejong.go.kr/bigdata)’을 구축하고, 29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시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해 시는 행정의 신뢰·투명성 향상을 꾀하고, 시민·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을 촉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예비창업가 등에게 데이터로 경제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갖는다.

개방형 플랫폼은 ▲빅데이터 이용신청 ▲빅데이터 분석자료 ▲시민 데이터지도 ▲아이디어공모전 등 6가지 메뉴로 구성돼 세종생활에 밀접한 교통물류·식품건강·재정금융등 총 385종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거래터(플랫폼) 이용자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방형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s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개방형 플랫폼 구성도(안)]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전체 공간 메타버스 구현한 ‘내포혁신타운’ 구축

혁신도시정책과. 2022.11.07.

국토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충청남도가 최근 홍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전국에 내포신도시(충남혁신도시)를 알린다. 내포신도시를 메타버스로 구현한 가상공간 ‘내포혁신타운’의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민에 서비스한다고 7일 밝혔다.

내포혁신타운은 웹(ZEP)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했으며, 인터넷 주소창에 ‘www.naepotown.com’을 입력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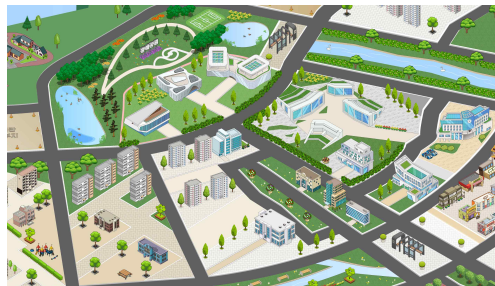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아바타를 통해 체험 및 탐험모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접근성도 높였다.

체험모드는 전망대, 내포썰(공공자전거), 5무(無) 도시, 시군 테마광장 등 내포신도시와 관련된 게임으로 구성했으며, 모든 단계를 마치면 포토존을 거쳐 인증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했다.

탐험모드는 내포신도시의 주요 건물과 도시존을 실제와 같게 구현했으며, 앞으로 내포신도시 발전 추이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내포혁신타운 방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명록이나 게시판을 통해 주민이 직접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고, 혁신도시의 주요 정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주민과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메타버스로 구현한 내포혁신타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9 772635 151400 9
ISSN 2635-5140